

## 수자원개발은 재정자금으로

최 택 만\*

지난 4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전후해 수자원의 확보·수자원 수요체계의 구조적 관리·수자원 절약 등 그 대안이 활발히 논의된 바 있다. 정부는 수자원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7조원을 투입, 다목적 댐 28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천년 이후 예상되는 물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목적 댐 건설은 가장 선결되어야 할 핵심적 과제이다. 따라서 수자원문제에서 댐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과거 수자원은 무한정 사용이 가능한 자연재로 여겨 왔지만 지금은 엄청난 투자와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공공재 내지는 경제재로 변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물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댐건설 적지는 감소하고 수질오염은 심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수자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91년부터 2001년까지의 20년간을 대상으로 지난 '90년 수립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사회간접자본정책 중 수자원계획은 최근의 가뭄 등 기후의 이상변화를 전혀 고려치 않은 계획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악화로 인해 21세기에는 물부족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의 날에 즈음하여 논의 된 문제가

운데 댐건설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가.

건설교통부는 2011년까지 17조원을 들여 28개 댐을 건설 한다는 것이다. 소요자금은 1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책당국과 학계는 먼저 과연 이 정도의 댐을 건설하면 한국이 물기근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댐건설의 적정수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따라 소요자금을 추정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정부가 건설키로 한 28개 댐으로 한국이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측이 타당할 경우 다음 문제는 재원의 확보이다. 28개 댐 건설에는 소요되는 금액 17조원을 향후 15년 동안 조달하려면 해마다 정부예산 가운데 1조원이 이 부분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96년 정부 예산 가운데 다목적댐 건설예산은 3천8백48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예산배정구조로는 재원이 턱없이 모자란다.

'96년 정부예산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예산 총액은 8조8천6백20억원이다. 이 가운데 도로부문 예산이 가장 많아 4조8백33억원, 두번째는 철도로 1조3천5백84억원, 세번째가 지하철로 8천3백99억원, 네번째가 항만으로 6천1백47억원, 다섯번째가 공항으로 4천4백52억원, 여섯번째가 다목적댐으로 3천4백48억원이 배정되고 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순위를 보면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8개의 댐건설마저 계획대로 추진

\*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더구나 댐건설을 더 늘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면 재원조달이 더 힘들어 질 것이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문제는 재원의 조달로 귀착된다. 앞으로 다목적 댐 건설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수자원개발의 실효성을 가름하게 될 것이다. 수자원개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당국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앞서본 도로·철도·지하철·항만·공항 등 투자순위를 댐 등 수자원부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서 수자원분야에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은 민자유치가 가능하나 댐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자원개발 재원은 정부예산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투자순위 또한 일대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고위층이 물과 공기는 자연재로서 그대로 두어도 얻어질 수 있다는 사고를 바꿔야 할 것이다. 다음 세기에 가 물기근이 발생한 뒤에 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때는 늦는다.

치산과 치수는 왕정시대 국가운영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치수사업이 「잊혀진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물론 최근 물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환경과 관련, 수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다. 그러나 환경의 일부로서 수자원의 개발이 역설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수자원개발보다는 절약에 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을 늘이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수요면에서 대책이 강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수자원이 계절적으로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 공급을 증시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바람직한 대안은 다목적 댐의 건설이다. 정부가 예산상 어려움으로 인해 수자원개발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물가격을 인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방법은 재원을 조달하면서 물절약도 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소득이 증대하면 물을 많이 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나 한국은 1인당 국민총생산(GNP)에 비해 지나치게 물을 많이 쓰고 있다.

물가격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싸다. 수돗물의 경우 일본 동경이 우리보다 4.3배, 미국 워싱턴은 10배가 비싸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물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소망스럽다. 물가격을 인상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자금을 수자원개발에 쓴다면 재원조달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정부가 분명한 정책의지를 갖고 수자원개발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면 재원조달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복지사업 등 다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재원에 한계성이 있다면 수자원개발의 일부분에 한해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민자유치의 경우 댐과 같은 수자원분야는 다른 사회간접자본에 비해 유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댐건설에 민자를 유치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민자유치방안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업차관을 허용한다든가 국내 은행대출기간을 현재의 최고 10년에서 20년 이상이나 기한철폐 등 조치가 있어야 하겠고 시설물의 기부채납 후 부가세 면제 등 다각적인 특별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